

서평의 사회인식론:

이영의 저, 『베이지주의』의 경우[†]

이 초 식[‡]

이 글은 서평의 사회인식론의 틀을 통해 이영의 교수의 저서 『베이지주의』(2015)를 하나의 사례로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여, 베이지주의 철학의 연구 모임, 새로운 인식공동체를 한국에서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발의의 결론에 이른다. 전통적 인식론이 인식주체를 개인에 치중하는데 비해 인간 집단에게까지 인식주체를 확장함으로써 인식의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사회인식론의 접근법을 서평의 분야에 도입해 보았다. 골드먼의 사회인식론 분류에 따라 첫째(SE I),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개인의 믿음을 형성하고 정당화하는 분야에서는, 서평 저서를 넓은 의미의 증언내용으로 검토했다. 둘째(SE II), 인간 집단을 인식주체로 하고 그 가능근거와 집단의 믿음을 집성하고 정당화하는 분야에서는, 본 서평을 북 심포지엄의 형식으로 논하는 한국과학철학회를 인식주체로 하였다. 셋째(SE III), 하나의 집단 인식주체가 다른 집단과 대비하여 이룬 성과를 검토하는 분야에서는, 서평을 과학의 사회인식론으로 다루며 인식공동체를 제의하였다. 특히 제의된 베이지주의 인식 공동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인의 철학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이영의, 알빈 골드먼, 베이지주의, 집단 인식주체, 사회인식론, 인지노동 분업화

[†] 이 글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leecs@korea.ac.kr.

1. 서평의 사회인식론 틀

이 글은 이영의 교수의 저서 『베이지주의: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의 여정』¹⁾을 논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저자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7장 “객관성으로의 두 번째 여정”을 읽다보니, 여기서 소개되는 골드먼, 키처 등의 사회인식론적 접근이 나에게서는 참신하게 보여,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려는 서평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평이란 해당 저서가 학계에 기여하는 점들을 지적하고 논평자가 이해되지 않는 면이나 달리 생각되는 바를 가려내 검토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저자의 답변을 듣는 대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인식세계를 개선해가는 사회적 인식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지주의와 관련하여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사회인식론(social epistemology, SE로 약칭)의 시각에서 나는 이 글을 하나의 사례로 검토한다. 우선 서평을 할 때 저자를 ‘화자’로 보고, 독자와 더불어 논평자들도 ‘청자’로 삼고 출발하며 저서의 내용을 증언으로 하면 서평은 이 세 구성 요소들의 관계로 이해된다. 저자는 독자층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독자는 주로 철학 전공자이고 타 전공자도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여기서 철학 전공자를 전문가(experts)로, 전공부문 이외의 독자를 문외인(novice)으로 호칭한다. 문외인은 철학전공 부문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다른 분야 전공자나 각 분야의 정책결정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포함될 수 있다. 학회에서의 서평은 주로 전문가들의 관계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학제적 관계가 필요하고 민주사회에서는 일반 시민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므로, 나는 문외인 독자의 역할도 취해본다.

저서의 이야기 내용은 지식의 체계, 특히 명제적 지식의 체계로 본다. 전통적 인식론에서 지식의 조건으로서 다루어온 믿음조건, 정당성조건, 진리조건²⁾의 세 가지를 우선 그대로 채용한다. 가령, 이영의 교수

1) 이하의 본문에서 따로 문헌을 밝히지 않고 쪽수만 표기한 경우 이 책의 쪽수를 가리킨다.

가 이 책의 저자라는 나의 지식은 ‘내가 그가 저자라고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은 정당화되어야 하며 그가 이 책을 쓴 것이 참이어야 한다.’ 이때 ‘이 책은 이영의 교수가 저술하였다’(명제)는 나의 믿음은 명제태도(propositional attitude)가 된다.

SE는 인식활동에 있어서 믿음태도라는 명제태도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둔다.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태도와 같은 정의적 요인(emotion)보다 지적인 측면에 치중했으나 SE는 명제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논의 범위를 저서 내용 명제를 믿는 믿음태도(doxastic attitudes)에 국한한다.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제태도는 1과 0 사이의 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인식론에 의하면, 전통 인식론은 개인의 인식에 치중하기 때문에 인식에 있어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교류로부터 떼어내 인식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간인식을 왜곡했다고 비판된다. 오늘날 인식을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는 널리 수긍되고 있으나 그 범위도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하여 간추려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골드먼(Goldman 2011; Goldman & Blanchard 2015)이 사회인식론을 세 분야로 구분한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이를 서평 논의의 틀로 채용한다. 첫째분야(SE I)는, 개인을 인식주관으로 하고 사회가 그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분야다. 증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타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개인의 믿음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증언을 사회적 증거(social evidence)로 활용하여 개인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작업이 평가 대상이다. 둘째분야(SE II)는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를 인식주관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인식주관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며 사회의 믿음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 등이 논의된다. 셋째분야(SE III)는 사회적 인식주관의 인식적 산물을 평가할 때, 그와 다른 사회적 인식주관들과 비교 평가하는 분야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이영의 교수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해 본다.

2. 서평의 SE I

서평의 SE I에서는 저서 내용을 증언 내용으로, 저자를 화자로, 논평자를 독자와 함께 청자로 하고, 저자의 7장 2절 “증언: 전통적 접근”(pp. 335-46)이라는 증언이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서평의 대상이다. 이 증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화자가 “증언의 전통적 접근”이라는 제목아래 기술하고 있는 철학자들을 보면 증언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한 18세기 영국의 흄(D. Hume)과 리드(T. Reid)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용되는 철학 저서들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글들이다 (Lackey 2008; Audi 1997; Goldberg 2006; Hinchman 2005). 따라서 이들의 증언논의는 ‘전통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호칭해야 할 것 같다. 그 접근방식은 최근까지 증언의 인식론적 가치가 소홀히 여겨오던 것을 새롭게 조명할 철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증언의 ‘전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면도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통적인 지식의 진리조건을 부정하는 상대주의는 인식의 큰 혼란을 야기해온 것을 상기할 때, 인용된 증언 철학자들이 그 혼란의 치유 방식으로 제기된 진리 회복 운동을 보면 그 증언 접근은 분명히 ‘전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접근’의 의미를 구별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저서에 논의되는 증언 정당화에 관한 학설들로서 비환원주의와 환원주의만을 우선 생각해보자. 저자가 증언의 전통적 접근에서 증언 인식론(epistemology of testimony)으로서 다루는 비환원론과 환원론(pp. 335-41)을 나는 SE I의 전형으로 보고 검토한다. 저자의 증언내용은 증언의 정당화를 위한 비환원론과 그 비판, 환원론과 그 비판을 차례로 소개하고 이 책의 기본 주제인 베이즈주의를 증언에 적용하면 환원론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좀 더 상세히 제시하고 저자의 대응책을 밝힌다. SE I에 따르면 저자인 화자의 이 증언내용에 대해 청자, 특히 문외인 독자는 누구의 어떤 주장이 옳다는 반응을 할 것인가? 문외인이 직접 논쟁을 판가름하기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을 것이다. 증언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배울 바를 찾고, 문외인들이 직

면하는 증언을 평가할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바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지식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글의 대부분이 증언이라는 SE I의 주장은 납득될 만하다. 비유해 보면, 이 증언 뭉치를 옥이 들어 있는 광석이라고 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여 옥을 채취할 수 있는 작업 수칙, 거짓을 피하고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증언을 뽑아낼 점검표가 필요하다. 증언을 믿음의 근거로 하는 비환원주의가 속기 쉽다는 비판은 이미 베이컨의 우상론이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등의 비형식적 오류론에서 경고해온 전통적 인식론 과도 상통한다. 하지만 올바른 증언은 우리의 지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증언을 폐기하면 저자의 지적대로 우리의 지식창고는 텅 빌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지식을 산출할 기구, 옥석을 가려낼 도구가 요망된다.

믿음의 옥석을 가릴 도구를 마련하는 데 환원설과 비환원설을 활용한다고 가정하고 양자의 공통되는 정당화 항목들을 뽑아 본다. 환원설의 정당화 기준인 ①감각적 지각, ②기억, ③귀납추리는 비환원설에서도 인정한다. 이런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뿐이다. ④‘증언을 반증하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는 조건이 공통기준이다. 이 기준은 양 학설이 인정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물론 저자의 환원설 비판에서 요구하는 필요조건(p. 342)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진리로 정당화되기도 어렵지만 오류를 완전히 피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필요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요청은 이해된다. 하지만 어떤 청자나 어떤 보고서에서도 통용되는 필요조건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하여 어떤 증언이 주어졌을 때 청자는 그의 필요에 의해 그 정당화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위의 정당화 조건을 활용하기로 한다. 화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요청의 추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⑤화자는 참인 진술 (또는 참일 확률이 보다 큰 진술)을 한다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 조건들은 청자가 증언을 믿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채택의 근거다. 다시 말하면 증언의 입증근거와 채택근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가령, 어떤 증언이 참일 가능성이 99%라면 입증근거가 크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 증거가 언제나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새로운 의약품이 치유율이 99%이지만 1%의 치사율의 부작용이 있다면 보건당국은 이를 결코 채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약을 100만 명에게 적용했을 때 1만 명의 사망자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외인인 청자는 해당부문의 입증근거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해당부문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집단의 권위를 믿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주장은 비록 그 주장 안에 보증의 언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약으로 보증하는 것이며 신뢰해 달라고 초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문가라는 사실이 초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집단이 단합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문외인은 허위보증서를 믿고 속이는 전문가 집단의 이익에 희생물이 될 것이다. 분업화와 전문화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 집단 성원간의 서로 도와주기 방식의 단합은 사회의 기강을 파괴하는 큰 범죄행위다. 사회적으로 보다 큰 권위가 주어져 신뢰가 깊은 전문가의 집단일수록 그 신뢰에 비례하여 책임이 크다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 부여한 문외인 청자의 보증조건 때문이라고 나는 풀이한다.

3. 서평의 SE II

서평은 타인의 증언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믿음을 결정하는 SE I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집단을 인식 주체로 하고 그 인식적 특성을 평가하는 SE II의 시각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서평에서 화자를 저자인 이영의 교수가 아니고 저자를 포함하는 집단으로 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서평이 논의되는 한국과학철학회를 화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과학철학회가 어떤 명제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유포하기도 하는 명제태도를 주체로 하고 그 정당성이 논의되는 영역에서 서평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공동수락 설명설(Joint Acceptance Account)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태도를 가져야 집단인식주체가 성립된다.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나? 그런 규정을 할 때 최근 사회인식론자들은 상호 인지 모델(mutual awareness model)과 할당 인지 모델(distributed model)을 구분한다. 구성원들이 집단의 명제태도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자인데 비해, 후자는 분업적으로 할당된 것만을 알아도 된다고 본다. 후자는 항해하는 선박에서 선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부분만을 알기도 하고 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나, 전체 목표를 지향하는 명제태도는 공동으로 수락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과학적 탐구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서평의 SE II를 논할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 특히 과학철학은 개별과학의 특수문제보다도 전체를 연결하는 간주관적인 분야에서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서평은 이런 역할에 의거하여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범위를 좁혀 베이스주의에 관심 있는 학자들의 모임을 인식주관으로 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점들은 유보하고 함께하는 의견들을 모아간다면 어떤 새로운 학풍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현재 서평이 그런 학풍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나 나는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해본다. 물론 그런 집단의 믿음 집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정당성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의 믿음 집성을 주제로 하는 SE II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집단의 믿음태도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 난제에 직면한다는 다음의 사례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

3인 합의 재판부에서 발생할 가상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전제1: 피고는 어떤 행동 A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전제2: 피고는 그 행위 A를 했다.

결 론: 피고는 그 의무위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제1: A행위는 의무나?	전제2: A행위를 했는가?	결론: 피고는 유죄인가?
판사 1	True	True	True
판사 2	True	False	False
판사 3	False	True	False
집단: 합의 재판부	True	True	True / False ?

전제1 자체가 의무인지 아닌지를 이 재판부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때 2:1로 되어 의무로 판정한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제2전제인 피고가 그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다수결로 한다면 피고가 했다고 판정하는 판사 2명이므로 합의부 판결은 피고가 A를 한 것이 되므로 합의부 집단의 판결은 유죄여야 한다(가로와 맨 아래 줄). 그러나 결론부분을 투표한 결과를 보면 역전되어 유죄판결이 1인인데 비해 무죄판결 판사가 2인이므로 무죄로 된다(세로의 끝줄). 그러니 이 경우 이 합의부 판결은 곧, 집단의 믿음태도인데 피고는 유죄인 동시에 무죄라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역설은 어떤 명제에 대한 집단의 믿음태도를 그 구성원의 믿음태도에 의거하여 규정하려고 할 때, 특히 다수결원칙과 판결원칙만을 교조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한다고 보아 ‘교조 역설’(doctrinal paradox)로 호칭된다.

4. 서평의 SE III

사회인식론의 셋째는 어떤 시스템의 활동을 그와 대립하는 대안들과 비교하며 인식론적 결과를 평가하는 분야다. 과학의 사회인식론, 민주주의의 지식이론,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법정에서의 진리규정과정 및 사회적 도덕인식론 등이 이 분야에 속한다고 본다. 서평의 대상인 저서 내용 전체는 과학철학자나 학파의 인식론적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과학의 사회인식론이 이에 해당한다. 과학의 인식론은 1960년대

까지 사회나 팀보다도 과학자 개인에 치중했으며 과학 활동을 지배하는 사회규범이나 협의방식은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 이후 사회적 관점에서 과학 연구가 활기를 얻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동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팀을 이루고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고 경쟁도 한다. 방법론을 지배하는 규범을 준수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명성을 얻기도 하는 등의 일을 한다. 과학의 사회인식론은 이와 같은 사회적 차원들이 과학 활동의 인식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의 사회인식론적 연구를 한 사람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라고 한다. 에든버러 학파와 사회구성주의가 거론되고 Barry Barnes, David Bloor, Bruno Latour, Steve Woolgar 등의 학자와 그들의 저서가 소개된다. 과학의 사회적 연구는 전통적 인식론과 과학철학과 큰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객관적 진리, 정당성, 지식 등의 개념을 거부하고 과학의 인식적인 권위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리는 외부 세계의 실재와의 일치라는 전통에 맞서 실재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 구성의 산물로 보는 사회구성주의와 달리, 과학철학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신기원의 저서로 평가되는 키치의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3) 이후 전개된 사회인식론은 전통 인식론의 핵심 개념인 진리와 합리성을 유지하면서도 인식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특색을 지닌다. 이 기준에 의해 이영의 교수의 저서를 검토하면 어떤 비교가 가능할 것인가?

우선, 저자가 머리말에서, “토머스 쿤이 패러다임 개념을 통해 자신의 의문점에 대해 한 가지 대답을 제시했다”(p. ix)는 대목은 인식의 사회성을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때 오늘날 사회인식론자의 대표적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 책의 지향점은 쿤이 부정했고 이어만이 포기한 부분, 즉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접근을 제시하는 데 있다”(p. xv). 여기서 강조되는 객관성이 상대주의 과학관의 극복으로 해석한다면 사회인식론과 매우 근접한 것 같다. 그러나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 여정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서는 외견상 과학의

합리성을 기본신조로 하는 사회인식론과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저자는 합리성의 개념을 그동안 논의되어온 베이지주의의 틀을 전제로 하여 주관주의적 합리성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합리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심슨 역설(Simpson's paradox)을 사례로 꼽고 있다. 이와 흡사한 난제는 SE II에서 이미 교조 역설(doctrinal paradox)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단의 믿음을 구성할 때 개인들의 믿음을 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교조 역설은 개인들의 선호를 집성하여 사회 서열을 규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애로우 역설(Arrow's Impossibility Theorem)과 유사하다. 애로우 역설을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 것처럼, 교조 역설의 해결책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저자가 배척하는 주관주의적 합리성은 교조 역설을 주장하는 사회 인식론에서도 수긍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과학철학의 쟁점들을 베이지주의와 연관하여 이 책은 짜임새 있게 합리적으로 다루고 있다. 쟁점을 선명하게 밝히고 대립되는 주장의 골자와 그 비판의 요지를 분명히 하고 저자의 논평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방식은 이성적 사고력 교육의 모델이다. 논평자 김준성(2016)도 지적하고 있듯이 저서는 “베이지 이론의 합리성이 왜 성공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베이지 이론의 문제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또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되거나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논평자 전영삼(2016)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베이지주의의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나 현실에 좀 더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베이지주의적 방법을 조절하는 일은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일 자체는 베이지주의를 그러한 영역이나 현실로 확장함(extending)을 뜻할 뿐, 베이지주의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시각을 정당화(justifying)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논평들을 볼 때, 저자가 거부하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합리성임에 틀림없다. “합리성만으로 이성적 판단을 보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합리성을 넘어선 이성적 판단을 전제한 것이며 그 후 논의의 전개

에서는 저자가 베イズ주의의 주관적 합리성이나 개인적 합리성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지향한다고 볼 때, 여기서 객관성은 이성적으로 파악된 간주관적인 것으로서 사회인식론적으로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사회인식론자들의 공통적인 진리관인 진리 대응설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견해인가? 명시적인 해답을 논평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리 대응설이 과연 사회인식론자들의 공통적인 진리관인가의 물음도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후자부터 저서에 제시된 학자들을 검토해보자. 진리주의적 사회인식론을 주장하는 골드먼은 당연히 진리 대응설의 대표자다. “골드먼의 진리주의를 여기서 다른 이유는 그의 이론이 과학의 객관성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회구성주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은 대인적이고 문화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고 인식 주체들의 간 문화적 고려나 모든 인식적 노력의 객관적 목표로서의 실재론적 진리 개념은 부정된다. 골드먼은 반실재론적 급진적인 사회구성주의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진리대응설을 부정하는 상대주의도 비판한다”(p. 348). 인용문만을 보면 저자도 진리 대응설에 호의적이고 이와 연관된 실재론과 이에 대립하는 반실재론을 거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저자가 지향하는 객관성은 간주관적인 것이고, 간주관성을 넘어선 외부세계의 실재에 대한 존재론적 언급은 없다.

다른 한편, 20세기 말 과학철학을 사회인식론으로 방향을 돌린 키처를 비판하는 저자의 글을 보자. “키처는 실험적으로 반복된 발견은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발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규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반복이 필연적으로 가설 수용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pp. 333-34). 인용문에서 저자는 키처의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저자가 요구하는 추가적 설명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키처의 사회인식론적 철학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자가 키처의 과학철학의 기본방향, 특히 규범과 기술의 관계를 묻는 것이라고 볼 때, 그

해답은 키처의 자연주의적 과학철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목표 추구의 자연스러운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하는 자연주의에 의하면 실험적으로 반복된 발견은 인과관계의 자연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가설은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다. 물론, 자연주의의 기반에는 인간의 간주관성도 넘어서 외부세계의 실재와 명제의 일치로 진리로 간주하는 대응설이 함의되었다고 볼 때, 그리고 진리 대응설의 강력한 증거가 경험적 증거라고 한다면, 실험적으로 반복 입증 가능한 가설은 참으로 간주될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5. 제언: 인식공동체의 형성

서평, 특히 신간 서평은 해당저서의 내용을 개괄하며 독자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여겨지는 특기 사항을 널리 알리는 안내역할이 주요 관례로, 신간 저서가 기여한 바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 저서를 화자의 증언으로 삼고 청자인 독자를 돕는 일, 전문가에게서 배우는 SE I의 영역이 지배적이다. 이런 점에서 서평은 학회발표논문에 대한 논평과는 구별되었다. 우리나라 철학회에서 논평을 도입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다. 그 이전에는 학회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이의를 감히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논박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찬동 일변도였다. 그러나 학문의 발전을 위해 대립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당시 젊은 철학자들이 공식 비공식 소수 모임에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공식 발표에서 ‘발설자’와 ‘질의자’의 형식으로 한국철학회에서 논평이 도입되었다. 발표논문에 대한 논평 도입은 점차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철학회 뿐 아니라 다른 학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이와 같이 발표논문의 논평에는 비판의 분위기가 지배해온데 비해 서평은 기여도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한국과학철학회가 서평을 북 심포지엄이라는 명칭으로 정기 학회발표에서 별도의 분과로 마련해 서평도 발표논문 논평처럼 비판적 검토

를 시도한 것은 새로운 발상이다. 여러 명의 논평자의 발표와 저자의 응답을 듣고 일정한 기간을 거치며 검토한 후, 논문집으로 출간하는 학회의 목표는, 물론, 논문형식이 우대 평가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최훈 2014), 나는 이런 북 심포지엄을 SE II와 SE III의 시도와 연결해본다. SE II에서 인식주관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삼듯이, 북 심포지엄을 인식주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참여자를 비롯해 베이즈주의를, 철학함의 도구로 검토하거나 그 자체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식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인식 공동체의 신념 집성이 쉽지 않다. 그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많이 수행되어 업적을 남겼으나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중단되면 소멸되기 일쑤다. 베이즈주의의 철학적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본 저서의 출간을 계기로 새로운 학풍이 조성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미 키처의 인지노동 분업화(Division of Cognitive Labor)를 주제로 한 연구(Kitcher 1993)가 SE III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키처의 한계기여보상모델, MCR에 의하면, 성과 얻을 확률이 낮은 방법에도 연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인력을 투입해 전체적인 인식성고를 높이게 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자들이 각기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면서도 연구공동체의 성과 확률을 높이는 경우를 보이기도 하고, 연구 초기에는 그릇된 가설을 지원하는 증거로 인해 잘못 판단하던 학자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초기에 무시했던 바른 가설을 지지하는 시행착오를 시뮬레이션으로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연구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우리의 연구방식을 한층 더 높이는 인식 공동체 형성을 제의한다. 논리와 수학을 포함하는 형식과학과 전산화를 활용하여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가 취약한 한국 철학계에 있어서 이 책은 분명히 새로운 방향을 조명한다. 한국 철학계는 세계철학계의 새로운 한 분야, 어쩌면 다른 많은 분야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중심부 철학이 될지도 모르는 분야 하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나는 베이즈주의 인식공동체에 호소해본다.

인식공동체 구성의 구체적 방법은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몇 가지 제의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우선 본 저서와 SE를 중심으로 철학의 기본전제로부터 세부적인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논의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으로 합의한 테제, 보류한 테제, 의견차이가 있는 테제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가르고 그들의 근거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평자 여영서(2016)가 베이즈주의 핵심 3개 테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자의 베이즈주의를 분석한 것은 인식공동체 형성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식주체 개인의 믿음태도를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집단의 믿음태도도 점차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학파들이 이런 과정을 명시적으로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는 밟아야 학풍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세계의 존재론적 문제, 객관성 문제, 합리성 문제, 진리 문제 등 굵직한 문제에서부터 작은 기술적 문제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작은 문제의 하나로 키처의 형식적 권위 분석에서 나타나는 개념혼동을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 키처의 합의 모형은, 논평자 천현득(2016)도 평하듯이 “저서에서 제안된 여러 견해들 가운데 간주관성으로서 객관성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시도”로 여길 만큼 주목할 만한데, 키처의 권위분석은 그 기술적 논의의 일부다.

부록: 키처의 권위 분석

키처(Kitcher (1993), Ch. 8 “The Organization of Cognitive Labor”)는 과학적 활동의 구조를 밝히는 모델 구성에 있어서 권위의 역할을 본질적 요소로 다루고 있다. 그는 과학적 인식의 사회적 맥락에서 권위의 역할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권위는 모든 사람들이 초기 인지활동에서 의존하는 일반인의 과거다. 가령, 성장과정에서 부모님 역할이나 학교생활에서 선생님 역할이 그 대표적인 권위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없으면 인간의 인식은 발전하기 어렵다. 둘째 권위는 과학자 사회에 입문하는 시기에 초심자가 그 사회에 합법한 인식적 권위자의 전반 사상을 지지하는데서 나타난다. 셋째 권위는 개별적 연구활동에서 과학자들의 상호 교류에서 발견되는 권위다. 다른 동료의 주장을 채용하거나 탐구할 때, 그리고 거부할 때도 권위가 작용한다.

이영의 교수도 본서에서 합의에 의해 올바른 수정이 나타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p. 329).

$$(가): P = 1 - \prod_i (1 - a^*(X_i))$$

(가)에서 권위함수 a^* 는 동료 과학자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볼 때 키처의 셋째 부류의 권위다. $a^*(X_i)$ 에서 권위함수 a^* 는 일항 함수이기에 이상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권위는 누가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이항관계의 함수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키처의 권위함수의 기본은 $a(X, Y)$ 다. 여기서 X 는 Y 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수여자인데 반해 Y 는 권위 수혜자다. X 는 개별 과학자나 과학자 사회가 될 수 있다. 과학자 사회가 개별 과학자 Y 들에게 부여하는 평균 권위를 ‘ a^* ’로 표시한 특수 권위함수다. 그리고 $a^*(X_i)$ 에서 X_i 는 생략된 수여자 X 가 아니라 수혜자 Y 이다.

키처는 과학자 사회에서 작용하는 권위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각종 개념을 개발했는데 그 중 기본 권위함수와 연결된 한 가지만 보기

로 한다. 과학자의 수행업적에 의해 얻은 권위(earned authority, ‘ a_e ’로 약칭, 업적형 권위)와 업적이 아닌 가령 과학자사회의 지위 등으로 얻은 권위(uneared authority, ‘ a_u ’로 약칭, 업적 외 권위)로 분류하고 가중치 함수를 w 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²⁾

$$(나): a(X, Y) = w(X, Y)a_u(X, Y) + (1 - w(X, Y))a_e(X, Y)$$

X 가 Y 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X 가 Y 에게 부여하는 업적 외 권위와 그 가중치를 곱한 것과 X 가 Y 에게 부여하는 업적형 권위에 가중치를 곱한 것인데 이 가중치는 업적 외 권위에 부여한 가중치를 1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키처의 다음 식 (다)³⁾는 개념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 a(X, Y) = w_1(X, Y)a_u(X, Y) + w_2(X, Y)a_p(X, Y) + w_3(X, Y)a_e(X, Y)$$

여기서 $w_1 + w_2 + w_3 = 1$, 가중치의 합이 1이라는 규약은 이해되나 명망의 권위, $a_p(X, Y)$ 와 업적 외 권위 $a_u(X, Y)$ 를 분리할 때는 개념구분의 혼란이 야기된다. 집합 권위는 earned authority와 uneared authority로 구분했으므로, 그 기준에 의하면, 어떤 권위이든 a_e 아니면 a_u 라고 해야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망의 권위(prestige)를 추가하려면 명망은 업적 외 권위에 속하므로 a_u 에서 명망 권위와 명망 외 권위를 다시 구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는 (라)로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라): a(X, Y) = w_1(X, Y)a_{u_1}(X, Y) + w_2(X, Y)a_{u_2}(X, Y)$$

2) Kitcher (1993), p. 315.

3) Ibid.

$$+ w_3(X, Y)a_e(X, Y) \quad ; \text{(다)의 수정}$$

합의를 통해 올바른 수정을 할 확률 (가)에 이어 기대효용 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p. 330, 오자 유의).

$$(\text{마}): U = (1 - 2\Pi_{i \in C}(1 - a^*(X_i)))u - \Sigma_{i \in C} d_i - \Sigma_{j \notin C} P_j e_j$$

합의에 의해 바르게 수정할 확률 (가)에서 높은 확률의 권위를 지닌 과학자 사회일수록 합의에 의한 수정이 바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된다. 하지만 그 권위확률을 결합한 (마)의 기대 효용 값이 어떻게 산출될 것인가? 그 산출을 위해서는 손익의 값을 계량화한 U 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파벌 C 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연구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데 따르는 손실 $\Sigma_{i \in C} d_i$ 도 과학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과학탐구를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여기는 시각에서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

키치의 권위분석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인식의 사회적 차원에서 권위의 구조를 밝히는데 크게 공헌한 것은 틀림없다. 권위의 등급화(calibration)를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심지어 과학자 동료들 간에 은밀히 주고받는 권위를 ‘back-scratching’(권위의 암거래)이라 지적하고 그 암거래의 유무와 관련하여 권위 분석의 틀을 짜보는 시도는 매우 흥미로웠다. 권위함수를 확률함수로 규정함으로써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와 권위에 호소하는 진리파악의 구분 문제를 가능성의 문제로 바꾼 것도 좋은 착상이다.

참고문헌

- 김준성 (2016), 「심슨(Simpson) 역설에 대한 베이즈망(Bayes Net)의 충족성 여부: 충실성(Faithfulness) 조건의 반례에 대한 평가와 의미」, <2016년 한국과학철학회 · 한국분석철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문>.
- 여영서 (2016), 「객관적 베이즈주의의 이념과 현실」, <2016년 한국과학철학회 · 한국분석철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문>.
- 이영의 (2015), 『베이즈주의: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의 여정』, 한국문화사.
- 전영삼 (2016), 「확장과 정당화 사이의 간극: 이영의의 『베이즈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6년 한국과학철학회 · 한국분석철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문>.
- 천현득 (2016), 「베이즈주의가 여정을 마친 곳은 어디인가?」, <2016년 한국과학철학회 · 한국분석철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문>.
- 최훈 (2014), 「『귀납』: 활발한 철학적 논의로 비약하기」, 『과학철학』 17권 3호, pp. 107-10.
- Goldman, A. I. (2011), “A Guide to Social Epistemology”, in Goldman, A. I. & Whitcomb, D. (eds.), *Social Epistemology: Essential Readings*,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man, A. I. & Blanchard, Th. (2015), “Social Epistemology”,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Kitcher, P. (1993), *The Advancement of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2016. 10. 31.
심사 완료일	2016. 11. 10.
게재 확정일	2016. 11. 24.

Book Review and Social Epistemology

Cho-Sik Lee

This paper is to propose a group epistemic agent of Bayesian philosophy in Korea by means of Young E. Rhee's book *Bayesianism* (2015) review from the point of social epistemology. For this purpose, three approaches to book review are considered in terms of Goldman's a three-part taxonomy for social epistemology. The proposed collective doxastic agen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 doing philosophy by using computer simulations for the division of cognitive labor.

Keywords: Young E. Rhee, Alvin I. Goldman, Bayesiansm,
group epistemic agent, social epistemology,
division of cognitive labor